

유럽 중소기업의 표준화 촉진시책과 시사점

1. 서언(序言)

유럽위원회가 유럽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이른바 New Approach라는 이름하에 각 회원국가들의 표준들을 조화 일치시키는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해 왔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는 유럽내 단일공통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에의 반영 일치라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매년 약 1000 건 이상의 표준을 채택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한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매우 부진하여 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사실을 중시하여 유럽 위원회는 소속기업 및 산업총국으로 하여금 표준화 실태 조사와 촉진정책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여기 소개할 내용은 동 연구작업의 최근 결과물로서, 네델란드의 업정책연구소가 유럽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유럽중소기업 표준화기구(NORMAPME) 등과 합동으로 지난 7. 8년간 각 회원국가들이 중소기업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개해 온 각종 지원시책 중 유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23개 성공사례에 관한 보고서(SMEs and Standardization in Europe) 내용이다.

2. 성공사례 요약

동 보고서는 예비 회원국가들을 포함한 32개 국가들의 400여 개 지원시책 중에서 그 효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선정하여 표준화 지원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 중소기업의 비중은 업체수 기준으로 99%, 일자리 기준으로 70%, 부가가치 기준으로 5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유럽중소기업들에 대한 종합 지원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기술적역량의 강화”(strengthen the technological capacity of small enterprises)이다.

이는 이른바 리스본 선언에서 21세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럽의 지식기반경제로의 도약이라는 정책 목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유럽의 표준화 지원시책도 중소기업 및 수공업체들을 주된 지원 대상으로 삼아 주로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400여 개 지원사업 중 118개 조치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소개되는 성공사례도 많은 경우가 표준에 대한 인식제고를 주된 목표로 삼아 세미나 또는 워크샵 등 여러 형태의 정보 전달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그밖에 회의 참석비용을 지원한다거나(5개), 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는 형태(4개) 등이다. 또한 시책을 추진하는 주체별 로 볼 경우 국가 표준화 기관이 가장



김 윤 광
한국기술표준연구원장
031-785-1210
ykkim@mpi.or.kr

많고(11개) 중소기업이 가입한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6개) 그리고 정부가 직접 앞장서는 경우도 꽤 있는 (4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 회원국이 표준에 대한 인식 높이고 관련 정보 제공에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는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들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특혜 규격에 대한 내용은 양식과 용어를 더욱 단순화시켜 중소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해 설(translate), 요약(downsize) 등의 필요성도 느낀다고 결론짓고 있다.

크로아티아	공동재정지원 인증프로그램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종합 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시스템 인증에 세금감면 등 재정지원
체코공화국	정보채널구축	개별 기업과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표준에 대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
덴마크	표준화 대학	국가표준화 기구가 표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자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대학(과정)을 마련하여 생산적인 학습환경을 구축
핀란드	여비지원	전기전자협회가 정부표준기관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TC 참가시 필요한 여행경비를 신청자에게 온라인방식으로 접수하여 무상제공
프랑스	표준화 패키지	중소기업부가 종합적인 표준화 패키지 사업을 추진. 국가표준협회(AFNOR) 내에 중소기업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표준의 도입과 실행을 지원
독일	직업건강및안전 (OHS)표준화	제품에 대한 표준확립을 일찍 완료한 기반위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현장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이른바 KAN 보고서를 마련하고 강력 추진함으로써 큰 호응
독일	기계공학 TC	기계분야 전문위원회가 DIN 지휘 감독을 받고 기능을 수행해 오던 것을 중소기업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2500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기계및 플랜트협회에 운영을 이관
헝가리	표준인식교육	중소기업들의 표준에 대한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표준기구(MSZT)와 각종 직업훈련기관과 공동협력방식으로 세미나 등 교육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운영
이탈리아	웹 사이트 활용	기술적 애로사항을 상호토의 하거나 경험을 전수하는 웹 사이트가 SNO (the National Union of Orthodontists)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것을 새로운 표준에 대한 토론과 해설의 수단으로 활용
이탈리아	체계적 컨벤션	기업연계 엔지니어, 중소기업, 기술전문협회가 공동으로 표준화의 주요과제에 대한 조직적인 컨벤션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에게 각종 자료제공과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
네덜란드	인식제고사업	경제성과 표준화기구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이 표준활용에 장애가되는 원인조사를 실시한후 10개 세부해결과제를 설정하여 2년간 300만유로를 투입하여 시행
노르웨이	네트워크 포럼	새로운 표준을 도입할 때 국가표준화기구 내에 설치되어있는 네트워크(Eforum 1 Standard Norge) 포럼에서 시작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현재 표준에 대한 이해가 증진. 표준정보 제공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적시 적소에 투명하고 깊이 있는 내용이 전달된데 높은 평가
룩셈부르크	정보보안표준	특정분야에 대한 성공사례로써 중소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크에 의해 결합되어가는 추세 하에서 우려하는 정보노출을 방지하는 표준제정과 적용노력에 집중. 동시에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ISO 27000-27009규격을 제공
말타	표준자료할인	국제 표준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규격자료제공
폴란드	융접분야훈련	융접분야의 연구, 표준, 자재 및 설비에 관한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우수한 전문가의 자문과 세미나를 시행하여 현재 융접기술의 중심기관으로 부상
폴란드	환경표준훈련	국가 수공업협회(ZRP)가 중소 수공업의 직업훈련을 담당하면서 유럽환경표준의 확산 및 대중화에 큰 기여. 이는 또한 폴란드 경제의 순조로운 유럽통합을 지원



포르투갈	대면 접촉	많은 기업들이 표준인식이 낮아 활동참여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서 10년전부터 국가품질기관 산하 표준국의 직원들이 직접 입우할당식의 표준판매사업을 시행해 옴
슬로바키아	직접지원	제조 및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술표준적용시 경제성에서 세금감면, 표준화의 경우 소비비용의 65% 감면
슬로베니아	세미나, 워크샵	중소기업과 수공업체를 대상으로 표준도입과 실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 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활용을 촉진
스페인	WG의 촉진	전자 통신협회가 관련표준의 확산을 위해 작업반(Working Group)구성을 지원하고 활동을 촉진시켰는데 그 성공요인은 디지털 프린트 기술, 배터리 등 특정분야를 제한하여 관련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데 기인
스페인	회의참가비지원	국가 표준 인증기구(AENOR)가 어떤 기업이 유럽표준제개정을 위해 역외지역으로 출장할 때 그 비용만큼 감면영수증을 발급하여 재정지원. 이를 통해 표준의 중요성과 활용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제고
스웨덴	회의여행비지원	전기분야의 국가표준기관인 전기전자위원회도 출장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데 다른점은 보고서 제출해야 지원된다는 것임. 이 보고서는 여타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도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시각에서 그들의 용어로 작성되어 더 유용성이 있기 때문
영국	회의와 소식지	설비구축 및 거래, 자동화 및 제어, 연구기술을 담당하는 협회인 Gambica에서 1982년부터 표준동향에 대한 회합과 뉴스레터를 발간 보급해옴. 이를 통해 표준화 과정에 참여도를 높이고 인식제고에 큰 효과를 거둠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표준의 활용도는 참여도에 비례

동 보고서가 연구를 통해 해결감한 사실은 표준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유럽의 3대 표준화기관(CEN, CENELEC, ETSI) 등이 CE 마킹 기준의 재정립 작업을 할 때부터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 즉 중립적 태도의 집합적 성취, 합의(이해관계자), 일반(사전) 공개, 합치(자력가 국제) 등 네 가지에 충실해왔으며 이는 표준화 과정을 유행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결국에는 모두가 표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결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문 기술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해관계자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첨단분야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미 국제기준이 있다는 이유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은 결국 현실 적용 단계에서 생애 요인이라 시변신하여 활용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2) 경제적 이익이 표준 수용도(Acceptibility)를 높여

독일 의성공사례 중 예정 목적의 소시지 절단기에 관한 표준 제정이 나오는데 제정 동기나 기술 기준 모두 사용상의 안전 확보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흥미로운 것은 이를 설명하는 근거로 사고 시 의 의료비 지출과 작업 손실 등 경제적 비용과 표준 적용 시의 편의를 상호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정작 사고 발생률이 1 | 2로 줄어든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처럼 보인다. 제품이나 서비스 표준이 많은 우리의 경우 표준 사용자들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 분석이나 홍보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나이 표준의 제, 개정의 착수 단계부터 이러한 고려가 수반된다면 사용자들로부터 환영받지 않을까?

- 참고로 독일의 ' 프라울퍼' 혁신 연구소가 1960-1996 기간 독일 산업의 총 생산 성장에 기여한 첫 번째 요소는 동 기간 중 축적된 자본재(총량) 팽창이었고, 두 번째 요건이

한 요소는 그때까지 축적된 표준(총량)이었으며 그것은 다른 각종 혁신수단의 0배에 이르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3) 각종 규제사항을 표준으로 흡수 통일

유럽이 각 회원국의 다양한 행정적 기술적 규제들을 다루면서 각기 상이한 법적 근거들을 폐지하기보다 CE 마킹 기준들을 비롯한 기술기준으로 흡수하거나 통일시키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규제완화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법적 근거에 의한 강제적 규제사항은 강제표준으로, 행정적 근거나 임의적 규제사항은 기술기준으로 그 내용을 치환시켜 인증방식 등으로의 제(擬制)한다. 다만 기업들이 여러 기관과 법률에 의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통합적이거나 통일된

방식으로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고 관련 규제당국도 자연스럽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중소기업 정책에서도 여타 부처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 중심의 현행 표준제, 개정 방식과 결부시켜 추진해 볼 만하다.

(4) 표준화의 효과성과 신속성이 더욱 중요

유럽 위원회 기발한 '유럽 표준화의 도전(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역내 시장의 원활한 작동 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가 반영된 표준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시장 수요와 직결되어 있는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바로 효과성(effectiveness)을 좌우하며, 계속 변화하는 기업 환경 하에서 신속하게(speed) 대응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과 케커니즘을 가지느냐 하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수요에 적합한 표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지만 문제는 앞서 말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표준화를 진행하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CE 마크를 획득하는 것에서부터 중국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표준화 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심 사항과 이해 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5) 표준화의 전체 과정에서 (준)강제적 요소를 배제

상기 성공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의 기본 원칙 그대로 자발적 참여와 활용을 전제로 하여 지원 시책이 추진되는 것임을 새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CE 마킹의 정보 제공에 있어 유럽은 EIC(Euro Info Center)를 통해 기초적인 안내 자료는 물론이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이해를 도와 줄 뿐만 아니라 마크 획득에 필요한 매뉴얼 제공은 물론 교육 컨설팅 기능까지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어떤 마크의 획득 문제는 마치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시장의 진입 자격 시험과 같이 간주되어 그 매뉴얼을 제공하면 오히려 불공정 심사 행위로 된 다거나

컨설팅 지원을 하더라도 심사원과 분리되어 하 는 견제 방식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국제 기준 예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유럽과 같이 무료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의 경우 산업 정책적 고려가 포함되어 마크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준다든가 자격에 있어 강제적 요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은 이제

폐지 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며, 본래의 표준 기능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성격이 없는 순수한 유도 시책만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믿어진다.

[기술 표준 2007. 10]